

## 2. 정부 정책 동향

### □ 정책 이슈 :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기 실시에 대한 논쟁

- (내용) IMF 체제 이후 금융 자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므로, 지난해 12월에 유보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과세 형평성과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조기에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됨
  -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지만, 그것을 현재 상황에서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가 논쟁의 핵심임
- (早期實施論)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 형평성뿐 아니라, 중장기적인 稅收 확대 및 금융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필요함
  - 금융실명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하자금 양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졌음
  - 정부는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펼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稅收 확보가 필요함
  -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천징수세율(기본 세율)을 인하하여 금융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 고소득자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 확대가 가능함
  - 현재는 금융권에 자금 유통이 경색된 것이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님. 따라서 금융 고소득자의 과세 회피를 위한 소비 지출은 경기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- (時機尙早論)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조기실시는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위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  - 현재 국내경기는 곧 底點을 통과하여 회복기로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음
  -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저축과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될 것임
  - 금융소득 자료의 공개로 인한 금융자산 노출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융 고소득자의 자금이 소비에 지출되기보다는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
  - 이 경우에는 금융 고소득자의 소비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
  - 금융 고소득자의 과세 회피가 심할 경우 낮은 원천징수세율로 인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

□ 정부 정책 동향 (11. 2~11. 8)

<p>공정거래위원회(11.3): 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년 시장 점유율에 따라 독과점 업체를 지정·고시 하던 규제 폐지 등 공정위 소관 75개 규제 중 31개 (41.3%에 해당)를 연내에 폐지 혹은 개선기로 함</li> </ul>
<p>산업자원부(11.3): 미분양 외국인 공단 임대 전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전용 공단의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여 임대로 전환</li> <li>- 연간 임대료는 평당 4,800원이나 분양가는 51만 2,000원에 달해 외국 투자자들이 임대를 선호하는 실정을 감안</li> </ul>
<p>기업구조조정위원회(11.4):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 기준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워크아웃을 퇴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</li> <li>- 엄격한 선정 기준과 기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</li> </ul>
<p>중소기업청(11.4): 中企 구조조정 채권 발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말까지 비실명 장기채권의 형태로 1조 원 규모 발행</li> <li>- 5년 만기에 연리 5.8%로 발행하며, 만기 후 일시 상환</li> </ul>
<p>제5차 정재계 간담회(11.5): 워크아웃, 5대 그룹까지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대 그룹 이하에만 적용했던 워크아웃을 확대하여, 그룹별로 주력 계열사중 1~2개를 선정하도록 요구</li> <li>- 실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선박용 엔진, 발전 설비 등의 업종은 실행 계획서를 주채권 은행에 제출토록 함</li> </ul>
<p>재정경제부(11.6): 금융종합과세 부활 방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96년 실시 이후 외환 위기를 맞아 중단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조기에 재실시할 것을 검토</li> <li>- 과세 공평성과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</li> </ul>
<p>수출지원대책위원회(11.6): 무역어음 1,000억 원까지 할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은행의 업체별 무역어음 할인 한도를 현재 500억 원에서 1,000억 원으로 확대하고, 수출입은행은 5대 그룹 계열사의 수출환어음에 대해서도 재할인</li> <li>- IBRD 지원 자금 10억 달러를 신용보증기관에 추가로 출연하여 수출 보증 재원 5조 원을 마련할 계획</li> </ul>
<p>산업자원부(11.6): 산업 관련 규제 정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본 상품의 수입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99년 6월까지 완전 폐지하는 등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폐지율을 51.7%로 향상</li> </ul>
<p>규제개혁위원회(11.8): 99년 규제개혁 지침 확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심 금융산업 진입 및 제2 금융권 경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, 기업 준조세 정비 방안도 마련 예정</li> <li>- '규제 벤치마킹 제도'를 도입하여, 국내 규제가 OECD 국가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개선</li> </ul>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